

# 2년치 임금 모아야 전셋값 마련

도내 평균 1억797만원

전국 평균보다 2년 짧아

도시근로자가 전복지역 아파트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년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12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전세금 마련 기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2015년 12월 기준 전복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는 1억797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소득(5.32만 원)의 약 2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년으로 가장 길었고 경기(4.2년), 대구(3.7년), 인천·부산·울산(3.1년), 광주·대전·경남(2.7년), 충남(2.5년), 경북(2.4년), 세종·충북(2.2년)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강원(1.9년), 전남(1.6년) 순으로 전세금 마련기간이 짧았다. 이번에 조사된 전복 전세자금 마련 기간은 예년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전복의 전세 자금 마련 기간은 국민은행이 평균

구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 소득	평균 전세가격	전세금 마련기간(년)
전국		2억 1343만원	4.0
서울	5321 만 7036 원	전체	3억 7800만원 7.1
		강북	3억 547만원 5.7
		강남	4억 3886만원 8.2
경기		2억 2587만원 4.2	
인천		1억 6397만원 3.1	
부산		1억 6702만원 3.1	
대구		1억 9898만원 3.7	
울산		1억 6285만원 3.1	
광주		1억 4209만원 2.7	
대전		1억 4566만원 2.7	
충북		1억 1797만원 2.2	
충남		1억 3127만원 2.5	
전북		1억 797만원 2.0	
전남		8439만원 1.6	
경북		1억 2973만원 2.4	
경남		1억 4263만원 2.7	
강원		1억 315만원 1.9	
세종		1억 18391만원 2.2	

※출처: 전세금·KB국민은행시계열, 도시근로자소득·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2로 산정  
전세가격 조사를 시작한 2011년부터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선물용 초콜릿, 해외직구 저렴

여러 개 구매시 최대 43% ↓

선물용 수입 초콜릿을 살 때 해외직구를 통해 여러 개를 구매하면 국내 판매가보다 최대 43%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선물용 수입 초콜릿 제품(세트) 6종의 국내의 가격 조사한 결과 해외 직접 구매가 국내 판매가보다 3.9~43.0% 낮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해외 구매시 배송(대행) 요금 부담 때문에 초콜릿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관세 면제 한도까지 구매

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조사 결과 씨즈캔디의 '토피에즈 초콜릿 7개의 해외 구매가는 19만5571원으로 국내 판매가(34만3000원)보다 43.0% 저렴했다.

로이즈 '나마초콜릿 마일드카카오' 21개의 해외구매가는 2만2883원, 고디바 '시그니처 트뤼프 컬렉션' 2개의 가격은 14만4054원으로 국내 가격보다 각각 38.4%와 26.5%씩 낮았다.

레더라, 레오나다스, 미켈루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명 해외 브랜드 초콜릿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3.9~22.0% 가량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주 기자



리빙박스 할인 판매 12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다양한 리빙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7일까지 전점에서 볼맞이 집단지 상수를 맞이해 전점에서 '리빙박스', '서랍장' 등 인테리어 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 대구희경지정리사업 156억 투입 6월 준공

전북 농어촌공, 지난해 가을 착수 추진 중인 10개 지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가 대구희경지정리사업에 잔결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156억원을 투입, 작년 가을 착수 대구희경지정리사업 10개지구를 오는 6월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개지구의 경지면적은 591ha이며 지역별로는 남원시 1개소, 김제

시 3개소, 부안군 1개소, 군산시 1개소, 익산시 1개소, 고창군 1개소, 정읍시 1개소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준공으로 불규칙한 농지, 용배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 규모화 현대화 영농에 알맞게 정비해 안정적 먹을거리 생산, 농어촌환경 개선, 농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규모화,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 노동생산성 증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수시로 지역 수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사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대구희경지정리사업이란 필지규모가 작은 농지를 대규모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신광영 기자

## 세수 12조 증가 불구 관리재정수지 30조 적자 지난해 11월까지

지난해 국제 수입이 12조원 이상 늘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8년 연속 적자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30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제수입이 2014년 216조5000억원에서 2015년 217조9000억원으로 12조 4000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정부는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조 2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0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연초 대비 58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I)는 2월 5일을 기준으로 8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주 기자

##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상공인 정부지원대책 마련 주장

최근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와 판로애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국회의원(남원 순창)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568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동향 체감지수가 지난 2013년 89.0을 기록하던 2014년에는 66.3, 2015년은 61.5 등 계속적으로 하락추세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행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출범이후 거듭되는 실정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생계형 기업, 가내 수공업 등 소규모 영세기업 운영자와 종사자 등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심각한 경영위화, 판로애로, 인력난, 자금난 등 각종 사중 어려움에 처한 578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책마련 일환으로 "우선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조성과 조기집행하고, 자금난으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예음·면·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200만원/m<sup>2</sup>인 지역에서 10m<sup>2</sup>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에 달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 수를 늘린 경우로 정했다.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위반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이나 임대를 하고 있어 당사자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책임 음·면·등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주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걸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http://www.jbbank.co.kr)